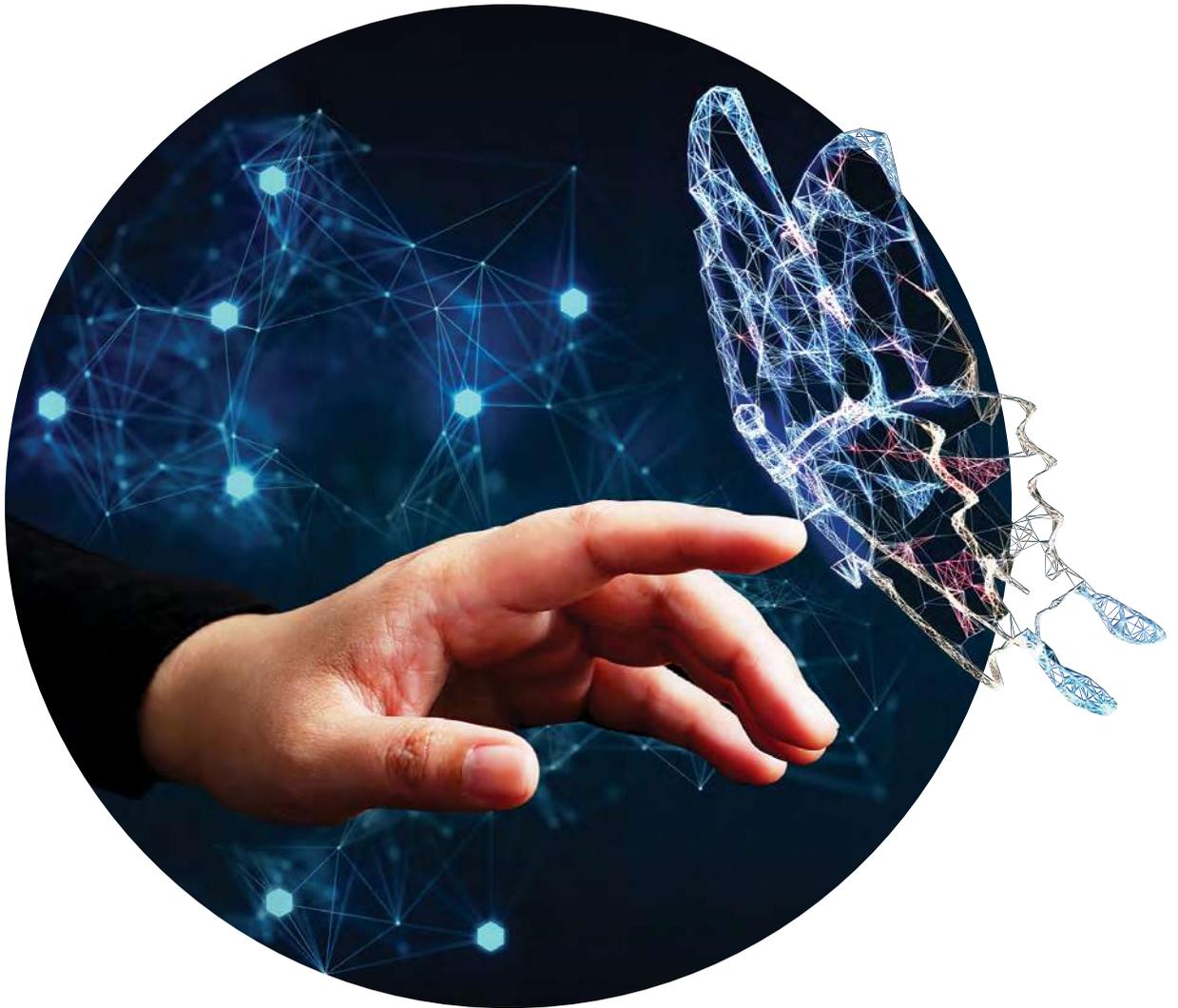


복 지 정 책 과 복 지 현 장 의 브 리 지

복지저널

February 2022 VOL.162



정보기술, 차세대 사회복지를 열다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터뷰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외된 우리이웃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화 한 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셨다면

☎ 1688-7934 로 연락주세요!



1인1나눔 계좌찾기



사랑나눔실천 후원 참여하기



-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출선수범하여 우리 사회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
- 후원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금액을 직접 결정하여 후원, 모금된 후원금은 국내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

사랑나눔 clean펀드 안내

펀드명	영역	세부내용
꿈나무펀드	아동·청소년 지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생계비, 학습비, 자기개발비 지원
행복한동행펀드	장애인 지원	장애인 가구의 생계비·의료비, 재활·생활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은빛노을펀드	어르신 지원	저소득 독거·치매 어르신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기 비용 지원
첫걸음펀드	사회복귀 자립지원	시설 생활자의 시설퇴소 시 자립비용(정착비, 주거비 등) 지원
희망나눔펀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소외계층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성인, 아동) 의료비 지원
고향사랑펀드	지역복지공동체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역모금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지원
좋은이웃펀드	복지소외계층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
푸드뱅크펀드	재해 재난지역	대규모 재해·재난 시 이재민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구호를 위한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

CONTENTS

복지지널

February 2022 Vol.162

발행일 2022년 2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인 김홍중

편집장 전우일

취재 박대하 이성우 한유미

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손수호
오단이 이길형 임은희

기사제보 02-2077-3999

구독신청·광고문의 02-2077-3931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우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times.com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디자인·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값 6,000원

1년 정기 구독료 72,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뒷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Cover Story

04



2020년부터 구축해 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올해 완전 개통되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 더 굳건한 민·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람중심의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과제 **04**

좌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착,
국민, 현장, 정부의 하모니 필요하다 **10**

10



정책&이슈

Policy&Issue

18



기고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과제 **18**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2**
디지털 세상,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26**
기고 |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자 **28**
통계로 보는 복지 |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는? **32**

현장

Field

34

42



나눔 행복, 행복 한국 만들겠다 **3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안전망, 시민사회의 역할 **36**
기고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그 의미와 필요성 **4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 쉼효성 **42**
나는 '사회복지사'다 | 이주희 **44**

인물

People

46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6**

50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50**

세계



일본 | 외국인 개호인력 확보 정책 **54**
독일 | 새 정부의 이민·통합 정책 **58**
미국 |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 **62**

문화

Culture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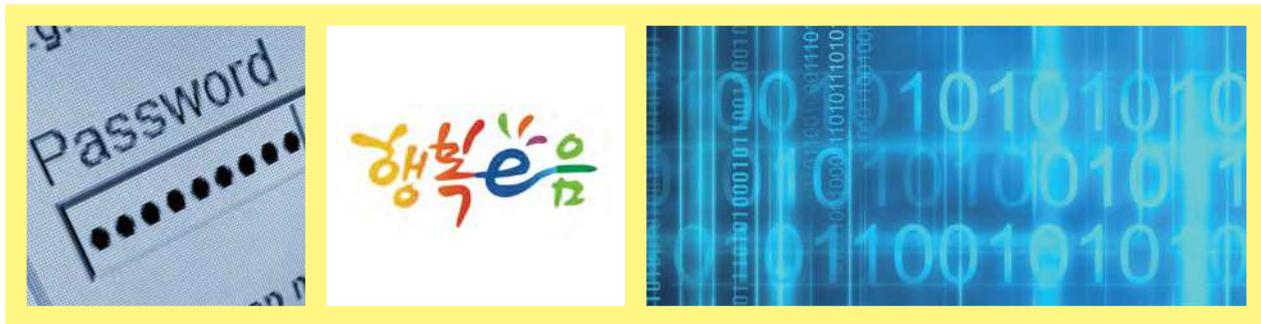
인문학 산책 |
돌아온 도개비 : 아나키즘 **66**
여기서休 | 부산 동구 **70**
뉴스, 신간 **7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람중심의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대한민국의 빠른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지 분야도 어느덧 정보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2021년 제한적으로 도입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1차 개통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의 고도화가 일부 이루어졌다면, 올해 상반기 예정된 2차 개통을 통해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이 사이버 상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의 곁으로 찾아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이 사회복지분야의 1세대 정보시스템으로써 당시 사회복지급여 전달 및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면, 차세대 시스템은 수요자의 이용과 참여에 기반한 시스템으로써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이 강하다. 좋은 복지 전달체계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전달업무를 보편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보나 서비스를 적시에 널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기존의 복지수급자 700만명 가운데 복지멤버십 가입에 동의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2차 개통을 통해 복지멤버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보편적 복지정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급여안내가 가능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각종 복지정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면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다. 마치 온라인쇼핑과 같이 편리하게 복지정보를 찾고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는 것과 비슷하다. 구석구석 발로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담고 가야할 변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구축하는 스마트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온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와 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담아내고 구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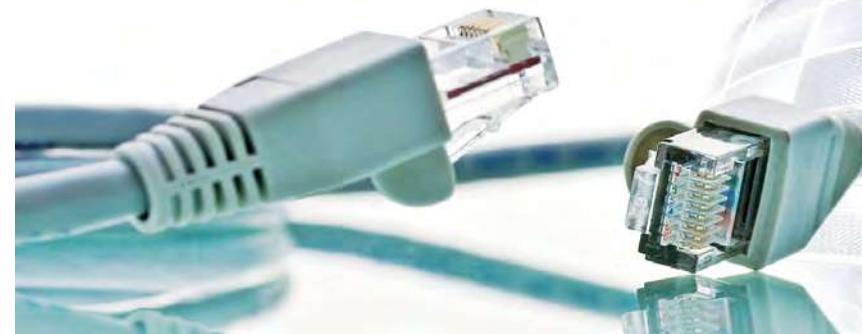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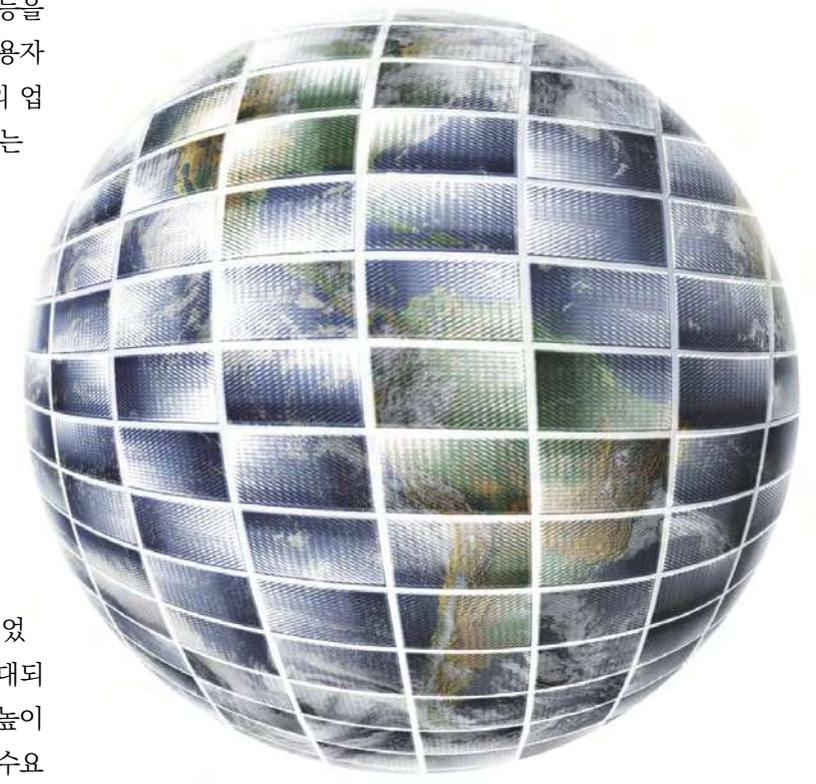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및 행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복지 정보화를 준비하였고, 2009년 12월부터 행복e음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행복e음 도입 이후 복지 정보화를 통해 소득·재산자료나 서비스 이력정보와 연계되어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급자 측면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보다 향상되었다. 여전히 복지급여 및 서비스별 특성이 다양하여 표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복지행정 상의 운영 효과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행복e음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급여 관리 중심의 행정편의 기능을 넘어 사용자 관점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행복e음의 업무용 정보접근 권한은 열린 정부에서 지향하는 공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간 정보접근의 차별화가 발생하며, 특히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현장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에 따라 시스템 활용도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앞서 사용자 중심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복e음 시스템의 주 이용자가 공무원이었다면,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국민 모두로 확대되는 만큼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이때 수요자 측면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¹⁾가 중요하다. 스마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1)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컴퓨터를 조작하여 원하는 작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출처: 정보통신용어사전).



온라인으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면, 선제적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호주의 복지정보시스템인 센터링크(Centrelink)는 웹 기반으로 모든 복지급여 신청과정을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급여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처리과정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전역에 설치된 사무소에서 무인안내 및 대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시스템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키오스크(무인안내기) 형태의 신청창구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정부의 역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

털 전환 수준은 가장 앞서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33개국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을 평가한 '디지털 정부평가(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디지털 정부에서는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 정부의 기준 가운데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갖추는데 보다 중요한 디지털 역량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이나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플랫폼 정부'가 있다. 둘째,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 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가를 보는 '열린 정부'가 있다. 셋째,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평



가하는 '선제적 정부'가 있다. 이 항목은 국민에게 번거로운 절차나 복잡한 정보 요구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다른 항목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위에 놓여 있는 항목이다. 국민 주도형 디지털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열어두고,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소외와 격차 없는 전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복지의 정보화'는 국가의 사회보장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복지 이용을 돕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4년간에 걸쳐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정보화를 대표하는 신기술 융합 정책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놓쳤던 사각지대의 문제와 삶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정보화를 대표하는 신기술 융합 정책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놓쳤던 사각지대의 문제와 삶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시스템이 담당하는 '복지의 정보화'를 넘어 '정보의 복지화'까지 살펴야 할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의 디지털 혁신이란 수단으로써의 '기술'과 목적으로써의 '사람'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사람 중심'이라는 절대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나 환경을 누릴 수 없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과 격차 없는 사람 중심의 보편적 정보사회로 나아가야 하겠다.①

OECD 디지털 정부평가(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평가항목	평가내용
① 디지털 우선 정부 (Digital by design)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시 법제도, 행정절차, 대국민 소통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뀌어나가는 노력을 평가
② 플랫폼 정부 (Government as a platform)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지침, 도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준을 평가
③ 데이터 기반 정부 (Data-driven public Sector)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와 함께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
④ 열린 정부 (Open by default)	정부가 가진 데이터,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지식 기반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 평가
⑤ 국민 주도형 정부 (User-Driven)	정부가 정책, 행정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⑥ 선제적 정부 (Proactiveness)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측정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10.1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착,



국민, 현장, 정부의 하모니 필요하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목적과 경과

사회 _____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시대였다.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던 행복e음 개통과 달리 이번 차세대 시스템은 2018년부터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개통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접목해 사회복지정책 현장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이슈가 대두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보시스템 때문에 이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청주의가 가지는 고질적 문제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례관리 단절 문제를 개선해서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었다. 복지부와 정보원에서 조금 더 부연해 달라.

- 사회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토론 김성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개발본부장
- 박영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홍화영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총괄팀장

4년에 걸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올해 하반기 차세대 시스템이 완전 개통되면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환호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무엇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座談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김성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개발본부장



● 박영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 박영웅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홍화영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총괄팀장

홍화영 _____ 국민에 대한 포용적 복지 서비스가 화두다.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부터 총 1907억원을 투입해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대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지역사회에서는 민·관 정보공유 및 협업 플랫폼이 구현되어 사람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복지멤버십)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개통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e음,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희망이음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김성훈 _____ 차세대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연구해 보자는 취지의 예산이 확보됐다. 2016년 7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이 수립됐는데 소요예산이 3000억원이 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됐다. 이 조사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절

차라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019년 4월부터는 예산타당성조사 후속조치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다시 진행된 이유는 사업에 착수하려던 2019년의 기술적·정책적 환경이 2016년 진행된 BPR·ISP에 기반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종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됐다. 행복e음이 '통합'이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면, 차세대 시스템은 '연결'이라는 가치에 집중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최대한 통합하고, 사회보장 영역은 많이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해 현장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들이 느꼈던 불편함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사회 _____ 2007년은 복지 정보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던 때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면서 2010년 행복e음이 개통됐다. 개통

초기에는 사(死)통망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 변화와 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행복e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현장 공무원, 민간 종사자들의 혼란이 있었다. 현재는 정보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현장 종사자들도 이미 각종 정보시스템 환경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로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할 때 당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나?

박영숙 _____ 행복e음이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사회복지 분야의 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생길 때마다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시스템'이 아닌 '사업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진다.

노인 대상 사업을 하는데만도 'e나라도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맞춤광장', 노인 일자리 '백세누리', 노인 자원봉사 '새누리' 등 시스템을 네 개나 써야 한

다. 특히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로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 시스템, 지자체 시스템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기능하면서 행정을 줄이고, 서비스를 늘려야 하는데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사회 _____ 복지급여 중심 대상자 선정 등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연계받아 활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사례관리 정보, 대상자 정보 등은 현장 종사자들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입력하는 정보로 축적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는 정보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기술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시스템 도입 초기 겪었던 많은 불편함이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현장을 그 정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박영웅 _____ 공무원보다 민간 종사자 수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또한

座談

복지멤버십,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상자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기대보다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기보다는 회계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법인과 시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기능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행복e음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의 변천 과정마다 현장 종사자들은 화면 구성이나 절차의 복잡성을 호소해 왔다. 행복e음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걸린 약 6개월 동안 현장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다.

사용자의 용이성,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과 동시에 사회서비스로 통칭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와 제도에 대한 각 부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 _____ 행복e음 개통 전만 해도 정보시스템이 많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수많은 새로운 복지제도, 사회서비스와 관리시스템이 생겨나다 보니 모두 연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행복e음 개통 직후 나타났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더 빨리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 차세대 시스템이 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 더 편리하고, 서비스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여러 서비스 영역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보시스템만

독립적으로 연계하기는 어렵다.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직·인력 문제처럼 정보시스템 연계 문제가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과정에 기존 제도의 대상자와 지원수준만이 아니라 전달체계, 인력, 예산, 재정분담 등 문제와 함께 사업별 정보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의 조화까지도 협의하도록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사회 _____ 복지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복지급여를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복지멤버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이는 주로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나?

박영용 _____ 복지멤버십 제도 취지는 좋지만 충분한 준비가 아쉽다. 정부의 안내를 받고 기대하면서 복지급여를 신청한 국민들에게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지 소관 지자체가 아니라서 접수할 수 없다거나, 서류를 이첩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게 된다면, 번거로움을 넘어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복지멤버십으로 36만여건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할인 등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장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면, 미리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음에도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면,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을 만나게 된다.

행복e음 개통 이후 모든 부처의 복지 업무는 조사관리팀이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형태로 굳어졌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제도를 신설·시행하는 해당 부서에 부여하지 않아 모든 정부부처의 사회복지 업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서로 내려오고 있다.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좀 더 과감히 배분되어야 한다.

사회 _____ 지적한 문제는 전달체계 상의 업무분장, 제도적 문제, 행정적 관행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자격에 해당하 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복지 멤버십 제도는 얼마든지 확대해야 한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했다가 약간의 차이로 재산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한 후 몇 년을 잊고 있었는데 조건에 부합한 상황이 됐음에도 다시 안내받지 않아 몇 해분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적시에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는데도 안내받지 못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재산조사 등이 필요한 서비스 수급 가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장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복지멤버십을 통해 일단 상담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조사·상담 과정에서 다른 복지급여 뿐 아니라 민간 자원이 연계될 수도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기대도 좋지만 실제 개통 후 기대와 다르다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제도적, 정책적, 전달체

계 등이 개선되어야 바뀔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차세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민간 종사자들이 기대와 다른 모습의 시스템을 보고 실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박영숙 _____ 국민 입장에서의 접근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국민도 복지급여를 알아서 찾아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지원해 준다면 왜 안해주나, 엄청 지원해 줄 것 같더니 고작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 다문화가족은 디지털 격차로 복지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편리해야 한다. 민간 포털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편리하게 구현된다면, 쓰지 말라고 해도 찾아 쓰게 될 것이다. 특히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다면, 접근성과 활용성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차세대 시스템에서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 등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나?

사회 _____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에 적절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로써의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등 이슈로 사회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홍화영 _____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관련 법령·제도적 근거 마련이 함께 추진된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에서도 대상자 동의를 기반으로 공적급여 이력, 사례관리 내용 등 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권한 차등 부여, 보안조치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정보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했다.

김성훈 _____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민간과 공공에서 사용하는 핵심정보 공유 체계가 완성된다. 민간 사회복지영역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 그리고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여러 사례관리 시스템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희망이음과 행복e음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체계였다면, 이제는 행복e음의 데이터를 희망이음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영용 _____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더라도 복지급여 대상자 책정 과정에서 다른 지원이나 급여를 안내하면서 이를 수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알린다면, 제공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기관 간에 어떤 사람이 무슨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 서비스 중복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사회 _____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상자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편리성을 강조한다면, 복지급여 수급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국민이나 소상공인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과정을 경험했고, 정보 제공 없이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은 복지멤버십과 차세대 시스템의 안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임을 유념해서 다른 부처로부터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범위, 조회 권한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한 사례가 있나?

홍희영 _____ 차세대 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국민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담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국민, 지자체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은 포괄적인 개편 방향부터 실제 구축되는 시스템의 화면과 기능 단위까지도 세세히 살펴보고 있다. 2020년에는 복지멤버십, 전국단위 신청, 복지지갑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고, 2021년에는 시스템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의 세부적 개선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시범 도입된 복지멤버십의 경우,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소통하여 문자안내 대상사업 및 시기, 통보 방식 등을 다시 한 번 개선한 바 있다. 실제 수혜사례 분석과 병행하여 제도와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변화 관리해 나가는 것이 차세대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이라고 본다.

김성훈 _____ 첫째, ‘복지로에 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회원가입 기능이 없어서 본인인증만으로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지지갑도 쓸 수 있다. 둘째는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데 왜 아직도 공동인증서 밖에 쓸 수 없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간편인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태동기였던 약 2년 전에 이미 복지로에 간편인증 기능을 도입했고, 향후 복합인증 도입 등 인증수단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민간 종사자가 더 긴밀히 협업하기 위해 제언할 사항이 있다면?

박영용 _____ 정보시스템은 일단 개통되고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면, 의견 반영이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시스템 간의 연동 등 기술적 문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또한 입력건수와 소요시간 등 업무량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들이 정보시스템 이용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여하는지 확인하고,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박영숙 _____ 정보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에서 왕래가 많은 인력들을 교육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주민센터가 상호 간에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 민간 종사자가 각자 모니터링하는 것은 업무 중복을 넘어 효과적이지도 않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개선해야 한다.

김성훈 _____ 차세대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과도한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 정보화라는 수단이 마치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고 있다. 기술 인력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도구가 좋아져도 도구를 쓰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기술이라는 도구는 정책을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정보시스템이 이용자를 구속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행복e음이 없으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

사회 _____ 이는 정보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역기능으로써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중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외에는 없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간에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은 결국 제도간 분절, 예산·인력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새로운 과제가 생길 것이다. 이를 해소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뿐 아니라 실제적인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과제



김형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발표하였다. 2022년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인프라와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120명)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2022년 상반기, 77억원)한다. 이는 2021년 8개 시·도(지자체 자체 예산)에만 설치되어 있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2022년에 전국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¹⁾ 둘째,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취업·건강·정서 등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자립여건과 관련하여 보호종료 후 3년까지 지급하던 자립수당을 5년까지 지급하도록 수당 지급기간 확

대, 자산형성 매칭비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상향, 2021년 1인당 최소 500만원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을 2022년부터는 최소 800만원으로 인상, LH 주거 제공 등 지원 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12호에서 자립지원전담기

1) 2022년 1월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10개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다.

관을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다.

시설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자립지원이다.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다섯째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38조를 통해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이다.

우리나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화된 사례관리 체계의 도입'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종료 초기에 일정 기간 지역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은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자립준비청년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과 신청 및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초기에 자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초기에 이러한 정보를 찾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종료 초기에 일정 기간 지역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 PA)를 두고 자립준비청년의 청년기 자립을 개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개인상담사는 자립준비청년의 법적 지원 연한인 21세 이후에도 최대 25세까지 개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지원 시설 등을 통한 보호종료 이후의 사례관리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자립지원시설 등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또 다른 시설보호라고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립지원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핵심 업무 되어야

2022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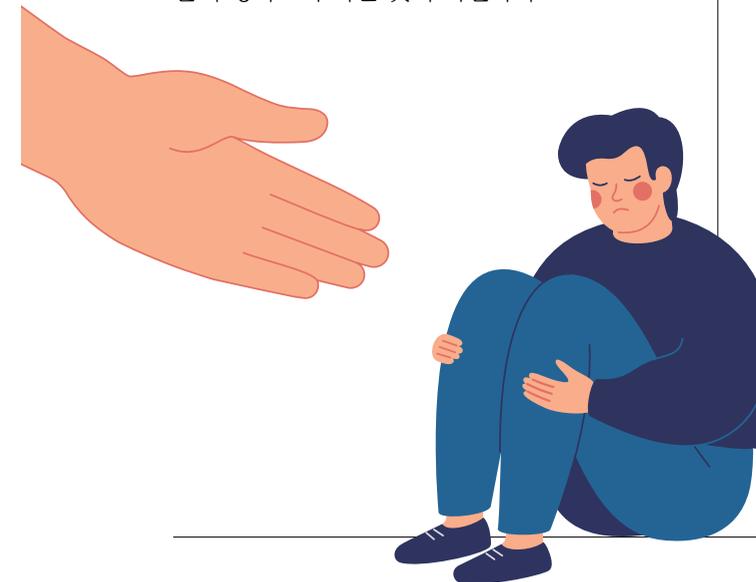
첫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4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없다. 따라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아동복지시설의 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5명’과 같이 별표 14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의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대상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후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한다.

셋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립지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자립지

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 관련 규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역할도 17개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 발굴 △자립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자립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자립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증진을 위한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이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지원 사례관리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과 지속적인 연락, 지역별 정기적 만남, 연락체계 마련 등 선후배와 동기들과의 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제안한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2022년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핵심 업무로 추가하고, 이를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 전문사례관리자’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자립지원 전문사례관리자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㉑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사회 위기를 진단하고,
소득보장체계의 미래를 논하다
사회안전망 4.0 포럼 개최



토론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 영향으로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정,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보장체계 또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월 14일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국사회 위기를 진단하고, 사회복지 환경의 미래예측 및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안전망 4.0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축사에 이어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혁신방향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역사적 진단

홍경준 교수는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그간의

제도 확장과 발전에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심부와 주변부로 단절된 노동시장을 꼽았다. 그는 “중심부 취업자는 조세를 부담하면서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수혜 자격을 갖지만 주변부 노동시장에서는 면세와 감세가 소득보장제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최근 노동자성의 범위 확장이나 사회권에 기초한 제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부 취업자가 느끼는 각종 사회부조와 보편적 복지 혜택의 체감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4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취업자의 50.6%,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7.3%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과 동시에 중심부와 주변부의 고용·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면서 비대칭적 고용 충격을 야기할 것”이라며 소득 분배 수준 악화를 우려했다.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필요

홍 교수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는 사각지대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현행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민소득보장제’를 제안했다. 그는 “무조건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대신 현행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혁신을 더한 국민소득보장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중위소득의 50% 이상 수준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취업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국민생활보험 적용대상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보장제는 취업자의 생활에 곤란을 끼치는 사회위험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현행 소득보장체계에서 소득의 상실과 소득능력의 상실에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소득의 감소와 소득능력의 감소에는 대비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취업자가 직면하는 사회위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현행 소득보장체계는 사회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모든 취업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사회보험 적용대상 제외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 실시간 신고를 기반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취업자·사업자·정부가 3자 부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사업장에 기반한 사회보험료는 국세청 월 단위 실시간 소득과약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민보험세로 전환하고, 취업자와 사업자는 국민보험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사업장 중심의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등 모든 소득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덧붙여 “정부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로 기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를 사회보험 기여의 한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실시간 소득과약이 되려면 조세와 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세청 소득과약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기반으로 전 국민 소득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부부처

국민소득보장제는 취업자의 생활에 곤란을 끼치는 사회위험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득보장 현금급여에 과세하여 보편지급, 선별 환수 원칙에 따른 분별복지가 이루어진다면, 보편·선별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도 일단 다 지급하고 종합소득 정산 시 재난지원금을 이전소득으로 과세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며 “처음부터 보편이나 선별이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홍 교수는 국민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사회보험 개혁에 대해 운을 뗐다. 먼저 통합형 공적연금에 대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하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일원화한 공적연금은 소득비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여러 층위를 구성하는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방안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병수당은 급여의 특성이나 가입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급여보다는 소득보장급여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국민활동급여’ 도입을 꺼냈다. 국민활동급여는 사회적 인출권 개념에 기초하여 근로연령 중 소득능력의 감소를 초래하는 활동에 대해 최대 48개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홍 교수는 “노동은 사회적 인출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는 과정”이라며 “교육연수·직업훈련 등 평생

국민소득보장제 : 혁신형 소득보장체계의 개요



출처 : 한국공공정책연구소 여전다 K 2022 정책집



교육 활동과 양육·간병 등 돌봄 활동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감소했을 때, 이를 권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충당한다”며 “제도가 현실화되면,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의 육아휴직,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는 국민활동급여로 흡수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또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은 유지되지만 일의 일부나 전부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실업급여 도입은 자격에 기초한 사회보험이 아닌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보험에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며 최저 생활보장수준 제고,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범주적 공공부조와의 연계, 이상 세 가지를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보장수준을 제고하려면, 급여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생계급여 수준이 낮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의 50%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집단과 노동가능 집단을 구분하고, 별도의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

음에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는 노동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제도 안에 하나로 묶여있는 탓도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소득보장제를 위한 혁신 전략

홍 교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상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원칙의 정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혁은 소득보장체계 혁신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득보장체계 혁신이라는 난이도 높은 어젠다를 해결하려면, 정책연합이나 연립내각 등 다양한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 비례대표제에서 복지정책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외 연구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작은 반면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크다”며 “산업정책으로 다루지는 중소기업과 농어가에 대한 지원정책도 실제로는 소득지원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사회보장 예산을 효율화시킨다면, 소득보장체계 혁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①

글 한유미 기자, 사진 이성우 기자



디지털 세상,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포용법 조속히 제정해야

디지털 포용법 제정 공청회 열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정보기술 발전으로 방역 패스 이용, 무인화 점포가 늘어나는 등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13일 열렸다.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했다.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포용위원회 신설·운영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과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노인·장애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기술

이나 서비스의 포용적 활용 촉진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한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디지털 환경은 생활의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면 누구나 부분부분 취약한 시기에 놓일 수 있다"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이 헌법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기본법임에도 개별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어색한 점이 있어 디지털 포용법 제정은 법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 첫 토론자로 나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법 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서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로써 의미가 있다"면서 접근성 보장 대상 장애인, 노인 중심에서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와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계 및 효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이 법이 "디지털 포용사회로 가는 출발점이고 첫걸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에서 디지털평등법이 통과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럽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디지털 역량에 대한 기본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포용계획(e-Inclusion Initiative, 2008년)'과 '디지털 유럽전략(Digital Europe Strategy, 2009년)', '영국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 2017년)', 호주의 '국가 디지털 포용 로드맵(A National Digital Inclusion Roadmap, 2020년)', 뉴질랜드 '디지털 포용 청사진(Digital Inclusion Blueprint, 2019년)' 등 각국의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 과정을 소개하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포용으로 전환됐다. 늦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정책이 수립돼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법안 제정을 반겼다. 그러면서 디지털 역량이 높은 노인들을 강사로 육성해 전국 6만7000여개 노인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장애인 분야에서도 많은 이들이 법안에



디지털포용법 공청회 현장 전경

찬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디지털 포용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 고려 뿐 아니라 장애인·노인 등 당사자들이 참여 방안 마련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능정보제품 항목 지정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지능정보사업자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 법안의 세부적인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법은 우리 부모님의 일이자, 내 미래의 일로 (법 제정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법이 된다면, 적극 시행하고, 집행하고,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광재·강병원·조승래·윤영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글 박대하 선임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자



이세형
신구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담론이 다양하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존재를 인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코로나19의 불편함은 수용하지만 이제는 이를 통제 범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소위 '작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 밀착형 복지를 주로 담당한 주체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았다. 이제는 그 '살아남음'을 통해 익힌 생존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에 대한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



다. 필자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다시 세상을 이롭게'라는 우리 사회의 공동 목표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재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구성은 국가만의 책임을 넘어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물론 착한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작전으로 위드 코로나에 최적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볼 '작전'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작전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섬세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공해야 한다. 즉,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례로 과거에는 도시락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대체식으로 제공되는 반건조 식품을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무인 음식주문 단말기인 키오스크(kiosk) 작동법을 비롯하여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SNS 활용법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세한 기능도 익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도 신경써야 한다. 따라서 '다시 세상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두 번째 작전은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할 준비다. 기존 사회복지시설은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공간이 주



는 안정감, 편리함, 공동체 의식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즉, 물리적 '집합'을 통해서 추구한 가치를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시설은 물리적 공간 기능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간을 확장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이제까지보다 지역사회가 더 많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계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은 서비스 수혜자에게 실익을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작전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구조사에 범주에 '몸을 소비하는 방식'을 추가할 것을 권한다. 욕구조사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몸을 소비하는 방식'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고민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워드 코로나를 앞두고 많은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민의 중심을 실천에 두자. 실천을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작전'을 활용하자

더욱 유용하게 쓰일 주요한 작전이다. 우리 사회에서 '몸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경제적인 소비가 가능한 계층만을 타깃으로 진행되곤 했다. 즉, 자본의 쓰임이 중요한 요소였다. 필자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사회복지 현장에 최적화해 시도해볼 것을 추천한다. 어려운 이웃의 삶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가 '삶의 결핍'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로 고려할 작전은 사회복지서비스 유통구조 개선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유통 경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즉, 공급자나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유통구조는 불안을 유발한다. 충분한 방역시스템이 가동된다면 이러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워드 코로나 시대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유통시켰다. 대면중심의 사

업은 상당 부분 비대면 전략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워드 코로나에 적합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는 음식 주문을 키오스크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새로운 시도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필요하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노력도 요구된다.

다섯 번째 작전은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의 강화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개념은 1950년대 미국 국방부가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오늘날은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야말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집합인 경우가 많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를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

자는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제안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도 매우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고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작업 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 관련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도 하고, 서비스의 효율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실천이 더 중요해진 워드 코로나 시대
필자는 다섯 가지 '작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작전'이 워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활용되길 희망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는 것

을 좀 더 명확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준비운동도 필요하다. 준비운동으로 필자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길 권한다. 참고할만한 질문은 다섯 가지다.

- 1. 지금 우리는 무엇이 불편한가? 혹은 불편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불편함에 적응하고 있는가? 혹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가?
- 3.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면 누구 만나야 하는가?
- 4. 만날 사람이 정해졌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 5. 과연,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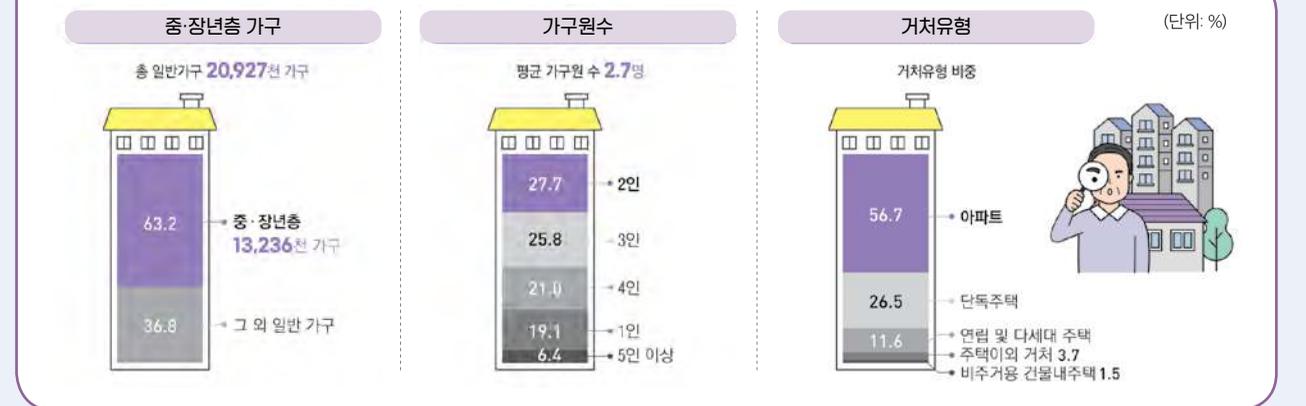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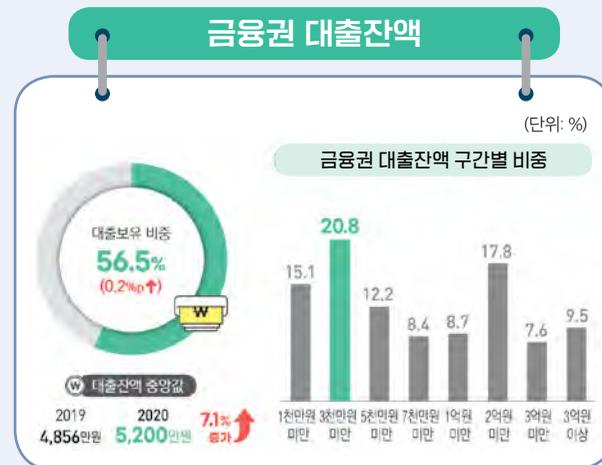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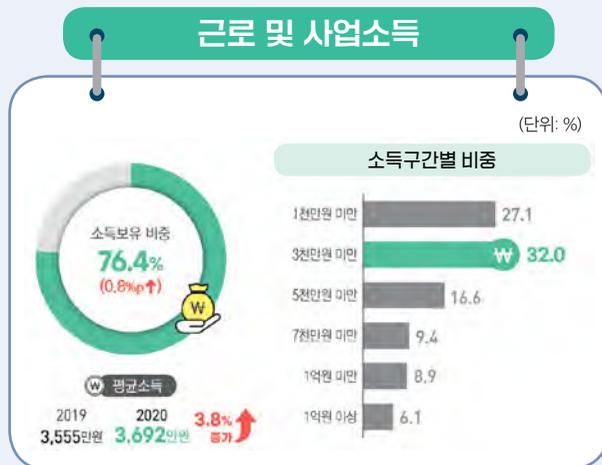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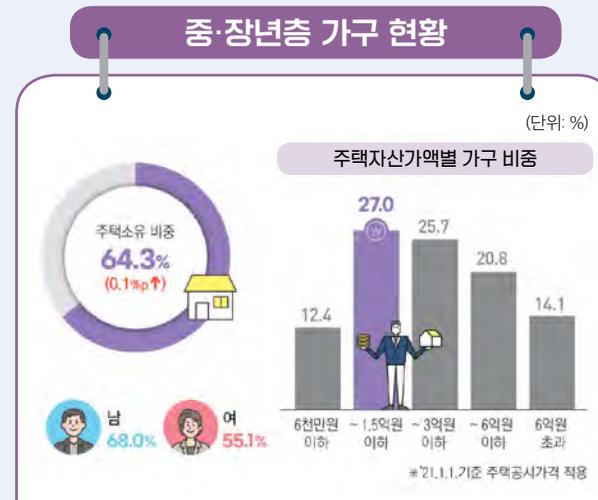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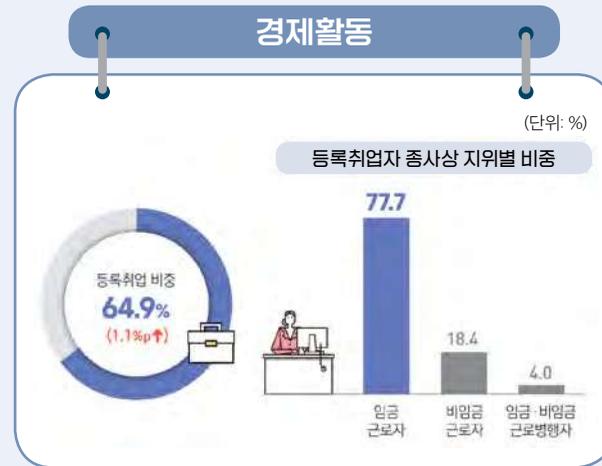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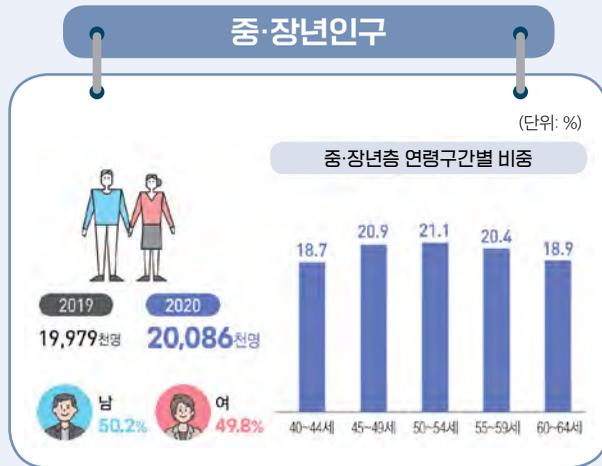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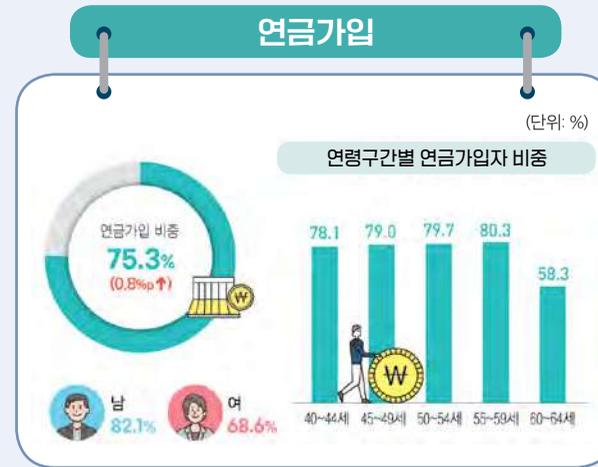
위 질문에서 각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해도 좋다. 새로운 '작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질문이 요구된다. 질문을 통해 해답을 구하고, 실천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워드 코로나 시대에는 알고 있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다섯 가지 작전을 제안했고, 이러한 작전이 반드시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분명한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고민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워드 코로나를 앞두고 많은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민의 중심을 실천에 두자. 실천을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작전'을 활용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움직이자. 왜냐하면 이 글이 소비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 중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중장년층 2008만명, 총 인구의 40.1%

중·장년 인구(만 40~64세) 64.9% 등록취업자, 전년보다 1.1%p 상승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는?



2022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나눔행복' 통해 '행복한국' 만들겠다

'2022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열려 서상목 회장,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당면 과제 제시

지난달 19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사회복지계 인사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내빈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자, 1952년 2월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설립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가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짚었다. 서 회장은 “올해는 '나눔행복'을 통해 '행복한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세 가지 당면 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활발한 나눔문화 확산과 나눔사업 전개를 통한 '행복한국' 구축 △민·관협치의 효율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빠른 기술혁신 속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구조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인 문제 제기과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행복한국 구축에 대해 “‘행복학’에 따



르면 나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행복한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우리 협의회는 자원봉사, 푸드뱅크, 사회공헌센터, 사랑나눔기금 등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치의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협력의 힘(Collective Impact)’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기관 간 및 민간과 정부 간 협치체계 구축,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정보원, 각종 복지시설 및 보건소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관건”이라고 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5% 인상,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성우 기자

1.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3.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4. 차홍봉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5. 조홍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6. 권덕업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7. 신년인사회에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홍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8.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 모습



국제사회서비스프로젝트 SDGs 4차 포럼 3일차

3부 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안전망, 시민사회의 역할

지난해 12월호 커버스토리에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 국제사회서비스프로젝트 SDGs 4차 포럼 ‘오픈 세션’과 ‘1부 세션 :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을, 지난 1월호 커버스토리에서는 ‘2부 세션 : 사회안전망과 기업의 CSR’을 소개했다. 이번호에서는 3일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마지막 날 진행된 ‘3부 세션 : 사회안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3회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한다.



(왼쪽부터)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3부 세션에서는 사회안전망의 한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 중 하나인 옥스팜(OXFAM)의 마리아나 안톤(Mariana Anton) 지역 디렉터와 제프리 마가냐(Jefferey Maganya) 지역 디렉터가 함께 ‘포용적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협력의 힘’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톤 디렉터는 “정부가 코로나19에 서둘러 대응하느라 협의와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시민 사이의 협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연대 형성, 격차 극복, 갈등 해소에 기여했고,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며 정부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가냐 디렉터는 “사회보장도 인권의 한 부분”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회보장을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해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모든 사람이 사회적 개입의 설계·구현·관리·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의 원칙 △성별이나 국적·장애 등에 따라 사회보장에 있어 차별적 압력이 없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의 원칙 △투명성과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가냐 디렉터는 “두려움과 배제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시민사회단체는 도움을 요청하기 가장 좋은 자원”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옹호 활동과 사회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는 이해영 아쇼카(Ashoka) 한국 대표가 ‘시민사회 자산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술 활용, 아쇼카 한국의 실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아쇼카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가에 대한 투자’와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



마리아나 안톤(Mariana Anton)
옥스팜(OXFAM) 지역 디렉터



제프리 마가냐(Jefferey Maganya)
옥스팜(OXFAM) 지역 디렉터



이혜영 아쇼카(Ashoka) 한국 대표

루션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쇼카는 현재 90개 이상의 국가에 약 4000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사회혁신기업가(Leading Social Entrepreneur)를 발굴해 ‘아쇼카 펠로우(fellows)’로 선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7년에 아쇼카가 선정한 펠로우인 로잔 해거티(Rosanne Haggerty) 미국 ‘커뮤니티 솔루션즈(Community Solutions)’ 대표가 미국 뉴욕에서 노숙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여울 굿네이버스 혁신사업팀장

나가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아쇼카가 이를 시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 발표는 ‘코로나19 시대의 시민사회단체(비영리기관) 현황과 민·관협력사례’를 주제로 김성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20년 5월과 이로부터 1년 후를 추적 조사한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직후 직접적 재정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1년 후에는 예산 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리더십 코칭이나 인적자원관리, 모금전략 지원 등 비영리 경영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욕구를 더 크게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의 한국과 여러 국가에서 메타버스는 첨단 기술을 사용할 만큼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실제로 비영리기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헝가리, 터키, 인도, 이스라엘,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각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통해 정부 혼자만으로는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팬데믹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는 ‘개도국 지역사회 내 코로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이여울 굿네이버스 혁신사업팀장이 맡았다. 이 팀장은 코로나 상황에

서 굿네이버스가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원칙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수행해 왔는지,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개도국뿐 아니라 시스템이나 역량이 잘 갖춰진 선진국 정부라 하더라도 위기상황에서는 긴급하게 다양한 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는 지역사회나 정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위기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장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아주 긴급한 단계는 지났다.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역의 필요를 살피면서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긴밀히 협력해 사회통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이자 또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역량있는 시민사회의 연대로 사회안전망 강화할 수 있어...

발표 후에는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정진경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수 이사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변화가 전개되고 있고, 종래 보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때로는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투·용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사회투자나 임팩트 금융 같은 혁신적인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컬렉티브 임팩트나 연대라는 말에는 함께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눠서 한다는 뜻도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시민사회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경 교수는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변모해 온 사례를 소개하며 “감염병, 위협의 일상화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더욱 굳건히 연대하고자 하는 ‘재난 시티즌십’을 새롭게 발견한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권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름다운재단은 NGO의 IT 환경을 조사하고, 지난해 33개 NGO를 선정해 IT 기기와 온라인 IT 활용 교육을 제공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통해 NGO의 IT 활용 노하우를 모아 시민사회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시민사회가 배우고,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긍정의 태도를 가질 때, 사람을 살리고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교수는 “한국사회투자, 아쇼카와 같은 툴(tool), 굿네이버스와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현장 실천, 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을 융합해 전문적인 역할 분담 속에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NGO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새로운 연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쳤다.⑩

글 박대하 선임기자

기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그 의미와 필요성



위선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협력실장

지난해 12월 22일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어 30일 공포됐다. 목적,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지도·감독,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지원사업) 제2호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협의회 간 협력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육성·지원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은 사

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 협력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예산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보다 확장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가 지방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정책 및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이관되면서 재정 또한 분권화됨에 따라 사업 수탁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 관련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면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진다. 지난해 말 기준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 중인 17개 시·도 및 162개 시·군·구 중에서 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12개 광역 시·도(70.6%)와 50개 시·군·구(30.9%)이다.

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하나의 단위사업 성격으로 규정됨에 따라 매년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한시적인 예산 지원이 반복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구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안한 사업구조와 지자체장 등 주요 관련자가 바뀔 때마다 보조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 및 이에 따른 예산 삭감 압력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셋째, 여러 지역에서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조차 어려운 최소한의 예산을 보조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지역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독자적

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까지 감당하기에 사무국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부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의 핵심 요소
최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근거 부재로 겪는 운영재원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지뿐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아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미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의 선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의 당위성,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이자 민·관의 가교라는 정체성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

도록 지자체, 지방의회,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협의회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ocial Service Network)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이를 감안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특정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만이 아닌 전국 모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계의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사회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조직, 지역공동체 구축의 컨트롤타워, 공공과 민간 간 간극을 채우는 조정자라는 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신소재로 미래 열듯 소외계층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주)효성,
소외계층 자립 지원 위한 사회공헌 앞장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우수기업 포상,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상 포상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양한 인증과 포상을 받은 회사, 바로 (주)효성이다. 효성은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자동차 시트벨트 원사, 에어백 원단 등 소재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섬유, 아라미드, 재활용 원사, 수소 충전 설비 등 신성장 동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B2B 기업이다.



효성은 지난 12월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는 제 22회 보훈문화상을 기업으로는 단독 수상했다. 최영범 효성 커뮤니케이션 실장(오른쪽)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호국보훈이라는 3대 테마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꾸준한 성과의 바탕에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경영 철학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활발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자사뿐 아니라 지주사 출범으로 분사한 4개 회사가 모두 지난해 통합 A등급 이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AI돌봄로봇 40대를 지원했다. 2017년부터 거동이 불편해 야외 활동에 제한이 있는 호국보훈 어르신들을 위해 역사 유적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지원 방법을 바꿨다. 코로나19로 더욱 고립된 고령의 독거 보훈대상 노인을 위한 AI돌봄로봇은 인형 형태의 로봇으로 약 복용시간 알림, 병원 예약 알림, 환기 알림, 음악 재생 등 24시간 일상생활을 도와 준다. 또한 움직임 감지 센서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능도 탑재돼 독거노인들의 안전뿐 아니라 우울증,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기업 단독으로 보훈문화상 포상도 받았는데 부상인 상금 1000만원은 다시 서울남부보훈지청이 관리하는 고령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겨울이불을 지원하는데 썼다.



꾸준하고 세심한 사회공헌 활동 눈길

또한 2013년부터 지원해온 저소득 장애아동, 청소년 재활치료 지원 대상자들의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효성은 장애아동 의료 재활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지원 대상 장애아동들의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도 2014년부터 교육비, 심리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소득 가정의 경우,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PC, 태블릿 등 IT 학습보조 기기가 없거나 노후되어 수업 참여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고 총 26명에게 IT 기기를 지원해 가정에서 장애아동 양육과 치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장애 형제의 학습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효성은 2013년부터 서울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돌봄교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등 취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50명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해외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도 이어졌다.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성 지역에 해외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를 파견하고, 1억원을 후원해 팡남성 내 저소득 미혼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빈곤층과 차상



- 2019년 효성 미소원정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베트남 동나이성 지역 롱터(LONG THO)초등학교에서 안과검진 중이다.
- 푸르메재단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가족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에서 이정원 효성 전무(가운데 오른쪽)와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운데 왼쪽)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 전무(왼쪽에서 두번째)와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AI돌봄로봇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 계층 미혼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양계·양돈 교육과 시설, 축산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과 나눔을 통해 수혜자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기업’이 효성 사회공헌 활동의 비전이다. 첨단 신소재로 미래를 열어가듯 효성은 우리 이웃들이 자립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글 박대하 선임기자, 사진 (주)효성 제공

나는 사회복지사다

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주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리

새해가 되면 늘 입사지원서를 꺼내본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쓴 글이라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데 제격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꺼내봤다. ‘Yes, we can change’의 정신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용감한 리더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밝힌다. 벌써 10년. 여전히 내가 왜, 여기서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다.

사회복지, 오랜 꿈의 시작

어린 시절부터 평화를 갈망했다. 사람의 행복은 평화에서 온다고 생각했고, 갈등과 고통이 없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인류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세계 평화를 마음에 품었다. 오랫동안 품어 왔던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꿈을 위해 약 3년의 시간을 백수

로 지냈다. 그 동안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보다 하루하루 먹고살 것을 고민하며 삶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해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먹고 살아 갈 고민이 털어지는 것에서 꿈도 행복도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이 시작이었다. 평화를 지키는 가장 쉽고 실제적인 방법은 가정처럼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회복지공부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이어져 대학원에서 2년간 사회복지공부를 공부하고, 사랑의열매에 입사하게 되었다. 공동모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함께 행복해지는 꿈을 실천하는 일

여러 업무를 거쳐서 현재 나는 사랑의열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개발을 목표로 2019년 신설된 전략모금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모금업무를 개선하고, 신규 모금사업을 기획·개발하는 것이 내 일이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알리고 나눔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명문기업’이라는 모금사업에,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등장으로 현장모금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현장모금사업과 연계해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기부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 공간인 제페토에 사랑의열매와 ‘희망2022 나눔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사랑의열매 x 체리랜드’ 나눔홍보관을 여는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1. SBS '소상공인을 위해 나의 한 끼를 기부합니다' 방송 중 인터뷰
2. 미국 델라웨어에서 열린 보스턴 대학 기업시민센터 주최 2019년 국제 CSR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나, 그리고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모금사업을 마련하고, 나눔문화가 조금이라도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쩌면 몇 년 뒤 썩어 날 것 같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바로 내일 혹은 몇 달 뒤에 썩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앗을 심는 이유는 언젠가는 자라게 될 나무를, 그 나무들로 가득찬 숲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처럼 나와 사랑의열매의 일이 다른 모금기관과 비영리영역에, 더 나아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분투 정신으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아프리카 반투어 ‘우분투’에서 유래한 질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섹터와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수록 이 질문은 마치 사랑의열매의 존재 목적을 묻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또 나를 향해 내가 내 인생을 어

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싸움이나 경쟁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함께하는 삶의 기적,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비록 바로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삶의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더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전 국민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시대, 누구라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분투 정신은 어쩌면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천 가지의 동기로 사회복지의 길을 걷고자 했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길목에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 소셜섹터와 사회복지현장의 지속가능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❶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억되고 싶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일한 의사로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보건의료정책·제도에 대한 입법과 예산을 모두 다루고 있는
‘코로나 의사’, 신현영 국회의원을 만나봤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소감과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 빠르게 달려왔다. 코로나와 함께해온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소감’에는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그 아쉬움의 근원에 대해 최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준비와 마무리를 감안하면 2년 정도 남은 셈인데 치열했던 2년에 ‘선택과 집중’이란 화두를 더할 생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코로나19 초기, 14번이나 검사를 받았으나 13번이나 음성으로 나타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폐렴으로 사망했던 정유엽 군 아버지를 지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모셨다. 한 맺힌 아버지께 발언 기회를 드렸고, 처음으로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 당시 정유엽 군 아버지의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그 한마디가 정말 무겁게 다가왔고, 의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에서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 유지와 방역관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 유일한 의사로서 지금까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는지?

정책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방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은 큰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폐쇄됐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우리 곳곳에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공백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감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한 몫 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 증액뿐 아니라, 국민을 돌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염 확산 억제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졌고 고립을 초래했다.

복지시설 운영 축소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 확대뿐 아니라 결식우려 독거노인이나 아동을 직접 방문하여 식료품 반찬 등을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병 위기는 일상에 치명적인 상황이다. 최근 복지시설에서도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철저한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을 세밀하게 펼치면서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제고 등 방역에 동참하고 대비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정부 사회복지 예산이다. 예산 결산특별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기대가 큰데…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OECD 회원국 중에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기준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2.2%로 OECD 평균인 6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 데에는 OECD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한 몫 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의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돌보느라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1. 신현영 의원이 2021년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3. 올해 1월 오미크론 대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은 신현영 의원.

예결위원으로서 역대 최대인 607조원 규모의 2022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 심사에도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들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은 더욱 열악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와 싸우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희생이 감염병 위기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감염병 고위험 시설에서 이용자와 동고동락하고 있다. 일부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집단감염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과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았다는 결과를 봤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10명 중 6명이 폭력을 경험했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일반인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힘내서 함께 이겨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감염병 시기에 가장 약한 고리인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 돌봄 제공의 취약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에 관심이 크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안전

망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대응 체계,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왔다. 아동 체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활동에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과 관리,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 미성년 아동을 발굴하는 등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작년 초 발생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 등 전문적인 판단이 부족해 사망사건을 막지 못한 현실을 짚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등의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전문의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117개 의학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복지와 보건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재택임종, 노인·장애인의 주치의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 번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어느 순간 쌓아온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의료이용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는 시스템 구축, 진료실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성 어린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마련, 생애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의 체계 구축 등에 일조할 수 있다면,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의대생 시절부터 해외봉사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위해 따뜻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보건 의료 정책을 위해 활동하는 동시에 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것 외에도 국민의 통합과 연대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또한 양극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약자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입법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만큼 감염병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①

글 전우일 편집장, 사진 이정수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9월 2일 제5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 노대명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노대명 원장은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노대명 원장을 만나 다양한 현안이 산적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개월간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9월 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10월 국정감사 수감과 11월 중곡동 청사 이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원에 맡겨진 역할의 중요성과 정보화 전문기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사 이전으로 직원과 고객에게 더 좋은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이 있었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복지로'를 통하여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자리를 빌려 청사 이전과 시스템 개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하면서 다짐한 각오나 경영방침이 있을텐데 무엇인지 궁금하다

취임 이후 파악한 정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인사와 소통부재에 따른 불만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담아 네 가지 경영방침을 세웠다. 첫째,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둘째, 혁신을 위한 융합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개방과 공유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개발하고, 공유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수립과 집행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넷째,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조직문화를 민주화하고,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갑질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상 네 가지 경영방침을 통해 정보원이 다시 한 번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보원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있다면?

정보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해 4월을 목표로 현재 2차 개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은 8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정보원의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보건복지 공공 클라우드센터, 사회보장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12월 노대명 원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정보원이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그간의 정보원을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합·재구성하여 개방·공개·활용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데이터들을 결합·공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주는 ‘선한 목적’의 정보 활용과 정부의 효율적 제도 운영,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회보장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전문가 육성 노력과 보건복지 공공 클라우드센터 및 사회보장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원에서 자랑할 만한 그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정보원은 사회보장 관련 8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위기아동 등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연간 약 36만여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으며, 소득재산 확인조사 및 부적정 수급 사전·사후 관리 등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정보화 전문기관인 정보원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책 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제공, 조사·연구 등 근거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원이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소개한다면?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 정보원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일선 의료 현장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선별진료 의료기관 관리시스템’을 즉시 개발하여 선별진료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을 모니터링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을 개발하여 공항 현장에 설치를 지원하고 활용 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정보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팬데믹 조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보원은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현금급여 지급,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최단시간에 수행할 수

1. 2021년 12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대명 원장과 함께 사이버안전센터를 라운딩하고 있는 모습.
2. 2021년 12월 신입직원 환영식에서 노대명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3. 2021년 12월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칭식에서 노대명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노대명 원장은?

인하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학사·석사를 취득하고 파리2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연구원에 잠시 있다가 200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까지 올랐다.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자문 비공개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 Science-Po de Paris 유럽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있는 인프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강력한 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정보원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권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개인별과 세대별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또한 국제청 등 전체 개인·법인의 소득 재산 데이터 연계가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가 바탕이 된다면, 정보원은 사회보장제도 실패와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종합

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과 추이, 수급률을 종합적인 통계로 작성·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프로그램별, 소득분위별, 인구집단별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보원은 보건과 복지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전 국민 대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경험과 탄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는 기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표준화에 힘쓰고, 둘째는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셋째는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 임기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천천히 끝까지’ 가보고자 한다.㉠

글 이성우 기자, 사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



개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인력 확보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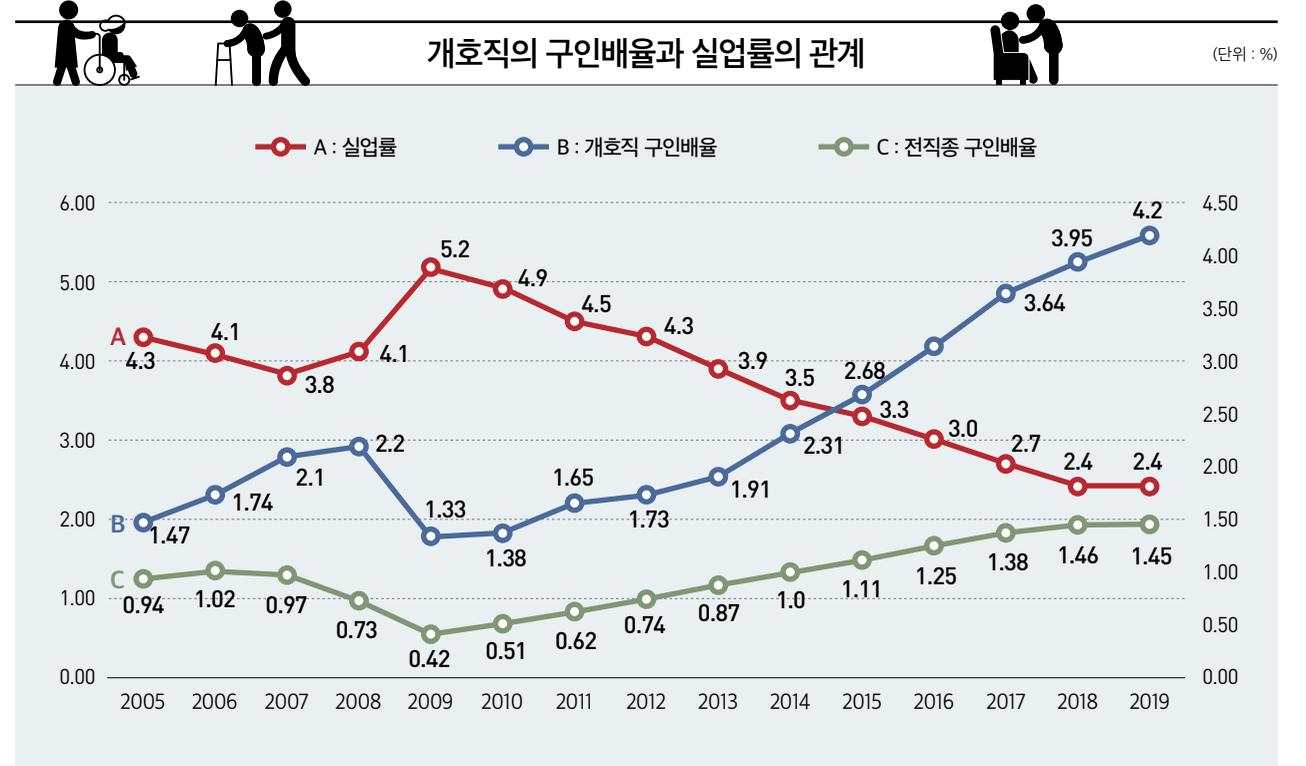
일본 개호서비스 분야는 급격한 수요 증가에도 비인기 직종으로 고착되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35만명, 2040년에는 69만명의 개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본은 외국인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구인배율로 본 개호노동 기피 현상

일본 개호인력 부족 원인으로 수요 증가라는 외적요인이 가장 크지만 개호(돌봄)가 비인기 직종이라는 내적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개호직은 업무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급여가 적고 처우 또한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해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개호직종 비인기 현상은 '유효 구인배율'을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구인배율이란 전국 공공직업 안내소에 신청된 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이다. 구인배율이 1.0 이상이면 구인이 구직을 상회함을 뜻하고, 그 수치가 높을수록 인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래프와 같이 개호직의 구인배율 추이를 보면 2005년 1.47에서 2019년에는 4.2로 늘어 인력부족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참조>

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실업률 및 타 직종과의 관계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구인배율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2008년 리먼 사태 여파로 실업률이 5.1%까지 치솟았을 때, 개호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의 구인배율도 급감했다. 이후 경기 회복과정에서 전체 직종에서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구인배율이 완만히 상승곡선을 보인 반면, 개호직 구인배율은



타 직종보다 몇 배나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구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타 직종에 비해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는 개호직으로의 유입이 현저히 줄거나 이직·전직 등 인력의 이탈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호직의 위상이 낮고, 나아가 고급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개호노동자 확보를 위한 노력

일본은 이러한 개호인력 부족문제 해결방안 중 하

나로 외국인 개호 인력 유치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1) EPA를 통한 개호복지사 후보자 유치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도를 통해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국내로 받아들여 육성하고 있다. 일본과 EPA를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3개국에서 각각 연간 300명 규모의 인력을 받아들여 개호시설·병원 등에서 일과 연수를 병행하도록 하면서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본국에서 간호학교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후보자 요건을 한정한다. 입국 후 4년 내에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계속 개호직으로 일할 수 있다. 2008년 100여명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매년 700여명 규모로 후보생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총 5063명이 일본에 들어왔다. 2020년 10월 현재,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782명을 포함해 3155명이 일본에 체류 중이다.

2) 유학생 유치에 위한 개호직 재류자격 신설

본래 외국인인 자격증 보유 여부를 떠나 개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재류자격(VISA)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개호직원으로 일하면 재류자격을 부여한다. 동남아 국가에서 유학생들을 유치해 자격증을 따게 하여 개호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대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개호전문학교 등 양성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양성기관 입학자는 정부 유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수료 후 연속해서 5년간 개호직에 종사하면, 대출학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성기관 외국인 입학자 수는 2017년 591명, 2018년 1142명, 2019년 2037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양성기관 졸업자 중 1324명이 개호직 재류자격을 취득해 일하고 있다. 아직 제도 도입단계로 실효성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개호직에 대한 외국인의 재류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한 개호인력 확보

1993년 도입된 기능실습제도는 본래 동남아 16개국 개발도상국의 산업인력이 일본에 일정기간(최장 5년) 체류하며 선진기술과 지식을 배워 본국에 기술이전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제조업 등에서 저임금·중노동의 대체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7

년부터는 기능실습제도에 개호직종을 포함시켜 최장 5년간 일본의 개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간에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4)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한

개호인력 확보

2019년 인력부족이 심각한 개호직종을 포함해 '특정기능 1호'라는 재류자격이 신설됐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자의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능을 보유한 동남아 12개국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수준의 기능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최장 5년간 개호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호직으로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어 시험과 개호기능평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 2019년에는 약 26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절반 정도가 합격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6만명 규모의 개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호시설의 외국인 개호직원 채용

이처럼 외국인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도 외국인 채용과 수요가 늘고 있다. '2020년 개호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시설 중 약 8.6%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구분은 '기능실습생'이 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호 재류자격(17.9%)', '유학생(12%)' 순이다. 시설종류별로 보면 입소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이 30%로 가장 많다. 또한 입소시설 중 약 33%, 재가시설 중 약 23%가 외국인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개호직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입소시설의 약 70%가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된다', '직장에 활기가 생겼다', '이용자가 즐거워한다'는 등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의 불안함, 생활·관습 등의 차이로 인한 고충, 직원들과 대화가 어렵다는 부정적 응답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개호직원 채용에 주안점이 맞춰졌지만 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재교육이나 연수체계 마련, 언어능력 향상 등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개호인력 정착 지원과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

최근 일본은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제도는 그러한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본이 보여 온 이민정책의 경직성과 관련된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본계 브라질인을 단순

일본 개호직원 부족문제는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주원인이지만 직업으로써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노동자로 받아들인 것을 시작으로 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 재류자격 등이 인정책이 아닌 단순 노동자로서의 외국인 유치라는 임시방편적인 수단을 지속해 왔다. 그만큼 외국인 지원정책 마련이 미루어져 온 것이다.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외국인 개호노동자 등 일본사회를 지탱할 새로운 구성원을 포용하면서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외국인을 위한 생활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등 체계적인 이민자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호직원의 사회적수요와 가치에 걸맞은 처우보장 필요

일본 개호직원 부족문제는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주원인이지만 직업으로써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메꾸려 하고 있지만 과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당장의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개호직에 대한 평가절하와 저임금 상태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케어인력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도 일본의 저임금 개호직을 외면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개호인력의 국적을 떠나 안정된 고용환경과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처우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유휴인력을 개호직으로 유입시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요양인력의 처우와 고용조건이 열악성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 돌봄은 언젠가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일'임에도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또한 곧 불어닥칠 요양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돌봄 노동의 사회적 수요와 가치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㉞



신호등 연립정부의

이민·통합 정책

2021년 9월 26일 독일 연방 선거가 끝난 후 연방 통계청은 유권자들을 분석한 통계를 내놓았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 전체에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구 대비 26.7%인 약 2600만명이다. 이 중 790만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 전체 유권자의 13%에 달한다. 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독일 사회는 이민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지난호에서 새 정부의 건강·요양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신호등 연립정부의 이민·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지혜 독일 RBO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world

총선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던 기민당은 출생률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인력 부족 직업군의 이민을 장려했다. 이번에 연정에 합의한 중도좌파인 사민당과 좌파인 녹색당은 선거 공약으로 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내세웠다. 자유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두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는 아니지만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위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한 후 발표한 연정합의서를 보면 이민·통합 정책(Migrations-und Integrationspolitik)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

전문인력부족(Fachkräftemangel) 해소를 위한 이민 강화 정책

독일 유력 정론지 슈피겔은 2021년 11월 24일 기사에서 전문인력 부족(Fachkräftemangel)

에 대한 독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인력 유치에 이민규제를 완화하거나 은퇴연령을 상향하지 않으면, 향후 2040년까지 독일 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약 1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감소로 향후 20년간 대졸자 및 직업교육 이수자가 줄어들면서 전문인력 공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다. 고용노동지원센터(Bundesagentur für Arbeit) 역시 2050년까지 약 1620만명의 전문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28~49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신호등 연립정부의 이민·통합 정책(Migrations-und Integrationspolitik)은 독일을 현대적 이민국가로 나아가게 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의 합법적 이민을 적극 장려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류 허가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블루카드(Blaue Karte)' 대상 범

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블루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독일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외국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2022년 기준 세전 소득이 5만6400유로(약 7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연과학, 수학, 의학, 그리고 IT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블루카드는 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수요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은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동반 체류가 가능하다. 블루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독일어 능력 B1 이상을 취득하면 21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3개월 이후 독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신호등 정부는 블루카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졸자가 아니라도 독일 직장에 채용된 경우,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블루카드 개혁과 함께 외국인 구직자에게 일정기간 주어지는 체류 허가인 '찬스카드(Chancenkarte)'를 도입하려 한다. 캐나다의 이민 점수제 시스템을 본떠 도입하는 제도로 학력, 독일어와 영어능력, 나이, 직업경력, 그리고 부족직군 지원에 대한 가산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찬스카드를 받아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연립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독일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당시 집권당인 기민당 정부는 블루카드 직종 종사자,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따라서 4년 동안 국민연금과 세금을 납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건을 채운 대상자에 한해 독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의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 한다. 또한 외국인 부모로부터 독일에서 태어난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이 5년 동안 독일에서 합법 체류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들이 학업·직업교육을 마치고 독일에 정착할 수 있다면, 양질의 전문인력이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사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에 합의하며 중점 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요양(Pflege)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 분야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독일의 장기적인 해결과제다. 연립정부는 요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보험료를 0.35% 인상한다. 또한 요양보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국가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요양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자국에서 독일어 코스를 이수한 다음 독일로 와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학력을 인정(Anerkennung ausländischer Abschlüsse)받은 후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필리핀, 튀니지, 베트남 출신의 많은 인력들이 구직기회를

1. 다양한 국적의 성인들이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
2.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난민 아동들.



얻었다. 독일 온라인 의료 소식지 에르츠테블라트 2021년 8월호 기사에 따르면 독일 국가 고용노동센터(Die Bundesagentur für Arbeit)와 인도네시아의 이민추진 단체(Indonesian Migrant Workers Protection Board)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로 오게 된 요양 전문인력이 2021년 하반기부터 뉘른베르크의 요양원과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호등 정부가 추진할 시민권 취득기간의 단축은 부족 직군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강도와 언어문제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구직이 용이하고, 일정기간 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정책(Flüchtlingspolitik)의 방향

독일의 연방 내각은 이민·난민·통합부(Bundesministerium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를 두고 있다. 이 부처명을 보면 독일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민정책과 더

신호등 연립정부의 이민·통합 정책은 독일을 현대적 이민국가로 나아가게 함과 동시에 전문인력의 합법적 이민을 적극 장려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불어 난민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민당 정부가 집권하던 2015년 이른바 ‘난민위기(Flütlingskrise)’가 유럽에서 발생했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 2015년 약 4만5000명, 2016년에 약 7만2000명, 그 후에도 2021년까지 매년 약 1만~1만5000명의 난민신청이 이루어졌다. 난민 문제는 앞으로 독일이 안고 가야할 큰 과제가 됐고, 새 연립정부 역시 공평하고, 신속하고, 합법적인 난민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2016년의 62.4%를 제외하면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 비율은 신청자의 40%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인정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모르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들이 독일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심사기간 중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기민당은 난민 인정 이전에 구직이 가능해진다면, 불법이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난민 인정이 거절되어도 바로 추방되지는 않는다. 난민 인정이 거부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관용(Duldung)’ 자격을 부여하고, 일단 독일에 체류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다시 난민 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난민 인정 거부 후



관용 상태로 머무르는 사람이 23만6000명에 달한다. 관용 인정자도 일단 직업교육을 받거나 일할 수는 있지만 우선 독일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 또한 오래 걸리며 심사가 까다롭다. 새 연립정부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개선해 관용 인정자도 더 쉽게 직업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이밖에도 난민 자격으로 독일에 온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통합코스(Integrationskurs)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할 것이다.

맺음말

현 연립정부가 추구하는 이민·통합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직군의 이민을 활성화하고, 난민들의 독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16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기민당 정부에 비해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다. 외국인과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진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길 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연립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해 볼 일이다. ㉠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 및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약화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대비 2020년에 10대 청소년의 정신 및 행동장애가 남성은 115%, 여성은 147% 증가한 바 있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역시 휴교 조치 등이 아동·청소년을 정신적·신체적 폭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로이터 통신이 미국의 7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의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건강 관련 스트레스 증가를 보였고,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 이용 증가를 보고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사회정서적 학습(Socio-Emotional Learning, SEL) 정책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 유가환 뉴욕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교 휴교 및 비대면 전환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낮춰

휴교 및 비대면 전환이 학생들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원격 학습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갈등, 부모의 실직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휴교 및 비대면 전환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즉, 우울증, 섭식 장애, 방임 및 학대 등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한 임상사회복지사 역시 휴교로 인해 학생들이 사회적 고립, 미래에 대한 불안, 우울 등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해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구제계획법과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 강화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정서적 학습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6일 통과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인 '미국 구제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약 1230억 달러(약 147조원)를 사회정서적 학습에 할당했다. 학생의 학습 및 개발, 교사의 웰빙, 가족과 지역 사회 간 파트너십, 보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학습 환경 등이 사회정서적 학습의 일환으로 포함된다.



사회정서적 학습의 구성요소



출처 : 사회정서적 학습 학술연합(casel.org) 홈페이지

사회정서적 학습은 △자기 인식(self awareness) △자기 관리(self 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 △책임 있는 의사 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미학교사회복지사협회(School Social Work Association of America)에서는 사회정서적 학습의 요소들이 사회복지실천의 강점기반 접근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시의 학생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시정부 단위에서도 사회정서적 학습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시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정책에 사회정서적 교육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4월 27일, 뉴욕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계획은 크게 △서머 라이징(Summer Rising) 프로그램 △모든 학교에서 사회정서 선별검사 참여 △500명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고용 △부모 대상 정신건강 관련 자료 및 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을 학기에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여름캠프이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프로그램과 뉴욕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국(Department of Youth & Community Development)과 협력하여 기본 교과과정과 함께 예술 및 야외활동, 사회정서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머유스취업프로그램(SYEP)의 기회도 제공받았다. 12개월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포함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실시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보건·안전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2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했고, 학교에서는 주로 독서 및 글쓰기 등의 교과과정 부분을, 비영리기관에서는 예술, 운동 및 야외활동을 담당했다.

또한 보편적 사회정서 선별검사(Universal Social-emotional Screening)가 진행되었다. 뉴욕시는 가을 학기에 대면 학교 복귀를 위해 모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사회정서 선별검사는 청소년들의 발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의 공통적 징후를 확인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를 더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는 3만명의 유치원 교사 등에게 트라우마 기반 실천(Trauma-Informed Practice)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인력 총원이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총 600명의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고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500명의 학교사회복지사, 60명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사, 90명의 학교상담사, 30명의 가족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거나 학교 내에 정신건강 클리닉을 설치하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 교육부의 유아교육 사회복지사(Early Childhood Education Social Workers)들은 '팬데믹 시기에 양육하기(Parenting Through the Pandemic)'라는 4주 과정의 워크숍을 부모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관리, 가족 복지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2000가구가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매년 2000명의 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인력 총원이 사회정서적 학습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주도하기도 한다. 뉴욕시에서는 '트라우마 대응 교육 실천(Trauma Responsive Educational Practice)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라인 트라우마 기반 치료 학습 플랫폼을 개통하고,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2021년 4월 말까지 7만5000명 이상의 교사 및 지역사회기관 인력들이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로 가는 징검다리(Bridge to School) 이니

셔티브'는 가을 학기에 모든 교사들이 학교에서 트라우마 기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위기 사례를 식별하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학생들을 파악해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인력들의 가중된 부담도 고려해야

새로운 계획이 인력 총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연수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 복귀에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기한내에 모든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가중되면서 교사들의 소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재임 기간에 걸쳐 정신건강 관련 이니셔티브에 주목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결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정신건강 지원정책 추진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되돌아온 일상에 따라 오랜만에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기 식별과 지원을 위해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들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⑩

돌아온 도깨비

아나키즘

A N A R C H I S M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도깨비 돌아오다

오늘날 아나키즘이 현란한 도깨비춤을 추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평등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공격하면서 한껏 자유인의 나라를 펼쳤던 아나키즘은 1930년대 이후 거의 논의되지 않아 사라져 버린 이데올로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아나키즘 사상은 신선한 저항이념과 운동으로 관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아나키즘 이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분단 구조 속에서 아나키즘이란 용어는 매우 불운한 이념으로 취급받아왔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일제식민 통치시대 독립투쟁기에 나타난 아나키즘을 재평가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고, 아나키즘 문예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경 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협동조합적 상호부조 운동 등이 아나키즘적 사유들과 연계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간 삶의 질과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적 자질 문제와 연결해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나키즘의 토착화에도 관심을 갖고 한국 전통사상에 나타난 각종 상생(相生) 사상과 접목시킨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붓다와 노장자, 그리고 예수의 사상을 아나키즘의 틀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위대한

인류의 선각자들은 아나키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노장자, 석가, 예수, 제논 등 수많은 인물이 아나키즘의 선구자로 거론된다.

오늘날 이러한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써의 관심보다는,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과 삶의 양식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19세기의 실패한 이데올로기로서 평가받은 아나키즘이 재생되는 원인은 오늘날 지구촌의 현상과 인간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 아나키즘이 많은 시사성과 상상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마치 변신술에 능한 제우스의 경호신 프로테우스(Proteus)와 씨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선과 권위를 배제하고, 또한 완벽한 이론을 거부하면서 자유와 개인적 판단의 우위를 강조하는 아나키즘의 자유인적 태도와 성격은 각양각색의 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 사이의 사상사적 불연속성의 시대에 구체화된 아나키즘은 다양한 모습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나키스트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체계 속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



오늘날 아나키즘은 정치적 영역을 떠나 다양한 영역으로 파종되고 있다. 즉, 자주관리와 공동체 운동, 녹색 정치의 구현,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환경 생태문제, 자유교육과 아나키즘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의 인터내셔널 운동에서 마르크스 주의와 충돌한다. 고드윈(William Godwin), 스테르너(Max Stirner),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 바쿠닌(Mikhail Bakunin),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등에 의해 아나키즘의 전통이 형성된 이래 아나키스트들은 '뒤죽박죽의 혼란된 설교자' 또는 '천진난만한 꿈의 옹호자'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아나키(Anarchie)'란 용어에 내재되어 있었다. 아나키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써온 오래된 용어이다. 아나키는 '지도자가 없는, 장수가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고, 무질서, 혼란, 혼돈의 대명사로 반대자를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 이용되었다. 프랑스의 프루동은 이러한 아나키란 용어를 역설적으로 채용하여 아나키즘의 사상을 표상하였다. 오늘날 아나키즘은 다양한 용어로 대체되어 불리기도 한다. 연합주의, 꼬문주의, 상호주의, 공동체주의, 리버테리언리즘 등이다. 한국에서는 '자유 공동체', 또는 '자주 공동체'로 불리기도 한다.

아나키즘은 바다로 향하여 흐르는 강줄기라기보다는 오히

려 지각의 여러 구멍을 통해 스며 나오는 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기도 하고, 지면의 갈라진 틈새로 분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교의(敎義)로써 또는 운동으로써의 아나키즘은 끊임없는 변동 속에서 생성되고 붕괴된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복될 뿐이며, 계기적인 맥락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다.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에는 단일 경전이 없다고 하면서 '아나키즘 사회는 성장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보하고 항상 재조정되는 사회'라고 본다.

아나키즘 정의론의 원천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자연론적 사회관', '자주인적 개인', '공동체의 지향', 그리고 '권위에의 저항'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이러한 네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아나키즘 연구의 석학인 알란 리터(Alan Ritter)는 아나키즘의 목표를 '공동체적 개체성(Communal Individuality)'을 단일 명제로 내세우고 이를 추구하려는 아나키스트들의 계획들을 분

석하면서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와는 다른 아나키즘 나름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자주적 개인과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구도는 그것이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실천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난하면서 자유주의로 남아있길 원하고, 마르크스 주의를 거부하면서 사회주의자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나키즘 속에서 환상이 가득 찬 사회 인식의 풍요한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아나키즘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매우 근원적이고 반정치적이다. 아나키즘이 제시하는 지향 가치는 언뜻 유토피안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아나키즘은 교조적 이념과 교조적 실천방안을 경멸하고, 조직을 경시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아나키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사상으로 평가받게 만든다. 그러나 정치적 태도로서 아나키즘의 영속성은 실패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아나키즘의 생명력은 그 실패를 통해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변신과 파종

오늘날 아나키즘의 재등장은 아나키즘의 예언력에 기인하고 있다. 19세기의 고전적 아나키스트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앞서 나간 선구적 사상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아나키즘은 유토피아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21세기의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아나키즘이란 용어를 빌리든 빌리지 않든, 아나키즘의 존재를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



세기를 전망하는 여러 이론들은 아나키즘의 사유 틀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현대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의 재등장으로 평가하고 있고, 아나키즘에 대한 사상적 선배의 족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나키즘 사회는 항상 성장해 오고 있는 욕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항상 재조정되는 사회라 하겠다. 따라서 현대의 아나키스트들은 고전적 아나키스트의 교의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사유의 틀은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현실 인식에는 창조적이다. 국가, 대의제, 조직, 법률, 분업 등의 문제 등에 있어 고전적 아나키스트에 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문제에서 그러하다. 과거에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번역할 정도로 통치기구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가 컸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해 감에 따라 종래의 국가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전적 아나키즘의 예언을 확인해 주고 있는 오늘날에 현대 아나키즘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 오늘날 아나키즘은 정치적 영역을 떠나 다양한 영역으로 파종되고 있다. 즉, 자주관리와 공동체 운동, 녹색 정치의 구현,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환경 생태문제 대응, 자유교육과 아나키즘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아나키즘의 저항기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세계적인 미국의 정치학자 앵터(D. Apter)는 아나키즘을 '분노의 피뢰침'으로 표현하면서 "아나키스트는 반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아나키즘의 특징은 권위의 저항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자 푸코(M. Foucault)로 연결된다. 오늘날 아나키즘은 이념이나 제도를 넘어 개인과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아나키즘은 삶의 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즘 사상은 이름을 떠나 다양하게 표현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나키즘이 바로 서는 것이리라.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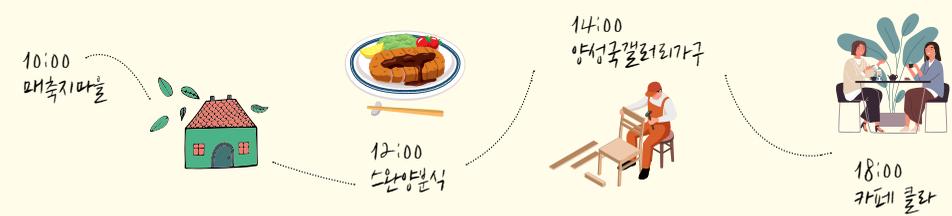
화려한 불빛과 떠들썩한 관광도시로 잘 알려진 부산 동구. 하지만 부산 동구에는 전혀 다른 모습도 남아있다. 한 사람이 지나기도 힘들 정도로 좁은 골목길,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들. 도심 속에 남아있는 작은 마을. 그리고 정겨운 가게들까지.

Busan Donggu



부산 동구

부산 동구를 밝히는 보석 같은 공간들



☎ 10:00

영화 속 그곳, 도시의 섬
매축지마을 埋築地



A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매축지 마을

좌천역 4번 출구로 나와 철길 육교를 지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가 나타난다. 아주 오래전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매축지마을은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터를 잡고 살게 된 곳이다. 이제는 보기 힘든 옛 모습 덕분에 영화 속 배경으로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영화 <친구>에서 고등학생이었던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골목도, <아저씨> 속 주인공이 있던 전당포 장소도 바로 매축지마을이다. 현재는 마을 주변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 12:00

든든한 옛날식 돈가스
스완양분식 Since 1993 Swan

A 부산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7-5
O 11:30~20:00(일요일 휴무)
T. 051-634-2846



‘백조’라는 뜻과 서양 분식이 만난 ‘스완양분식’.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겠다는 신념으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수제돈가스, 수제 수프, 햄버그스테이크, 오므라이스 등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차려낸 음식 덕에 단골손님이 적지 않다. 특히 옛날식 조리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돈가스가 유명한 곳. 후추를 듬뿍 넣은 수프와 짝두기 반찬까지. 추억의 맛이 그대로 남아있다.



☎ 18:00

고소한 커피 향기
카페 클라 CLA

A 부산 동구 중앙대로 461 카페 클라
T. 010-3851-8046



클라리넷을 좋아하는 카페 주인의 취향대로 ‘클라’라고 이름 붙여진 카페. 좌천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이곳은 가구거리를 구경하기 전이나 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기기에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메뉴 중에서도 모든 차 메뉴와 딸기 라떼, 망고라떼 등은 수제로 만들어 인기 있다. 커피 원두도 에티오피아나 케냐의 고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 14:00



원목의 아름다움
양성국갤러리가구 Yanggallery

A 부산 동구 중앙대로 461
T. 051-632-5277



부산하면 60년 전통을 간직한 ‘좌천동 가구거리’를 안 가볼 수 없다. 70여 곳의 가구점이 모여 있는 이곳에 양성국갤러리가구가 있다. 100% 원목으로 만든 좋은 가구를 팔고 있는 이곳은 견고한 제품에 피니싱공법을 사용해 질감이 좋은 것이 특징. 80% 이상을 수제로 만들고 있다.





FEB. 2022



정부·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에서 위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세부 사항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앙처우개선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처우개선위원회를 각각 두게 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꾸리도록 돼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8일까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6월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1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됨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방역을 위해 모든 종사자들에게 감염예방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요양시설 내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별도로 입소자 1인당 1만1000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비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한다.

그간 요양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입소자들에게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통해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 등 기관 방역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하고 필요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위탁부모 Pool'을 활용하여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국 확대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가정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비혈연)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전문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다.



www.bokjimes.com

“장애인 자립 돕는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모집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곳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자립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총 10곳이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자체 여건, 지원 실적,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곳에는 자립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주택 수리,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원이며, 국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으로 자립 지원조사와 면담을 거쳐 지역별로 20명씩 총 200명을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복지관 자원 등을 연계한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 1인가구 월 최대 30만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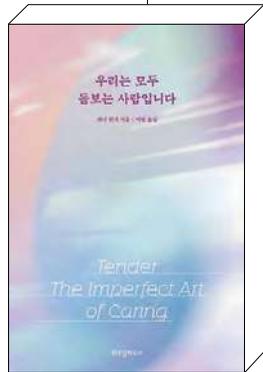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이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5%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595만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으로 약 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간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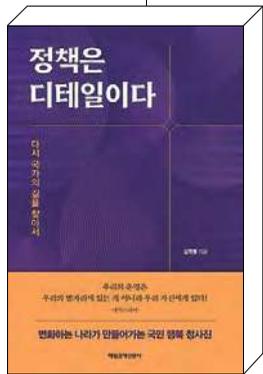
2월의 추천 도서



우리는 모두 돌보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우울증을 앓던 엄마와 자폐인 아들을 돌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해보려는 깊은 호기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장애가 한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 말하는 사회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책은 저자를 포함한 수많은 돌봄자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돌봄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돌봄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인간 삶이 다 그렇듯 돌보는 삶에도 그만큼의 시련과 기쁨이 있을 뿐이라는 담담한 진실을, 우리 사회에는 돌봄을 돌보아야 한다는 힘 있는 목소리를 전할 것이다. 이 책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돌보는 사람에게도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쓰였다. 우리는 모두 돌보는 사람이었거나 돌보는 사람이거나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책 속 돌봄자들의 이야기가 보다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돌봄을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다.

페니 원서 지음 | 이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1년 12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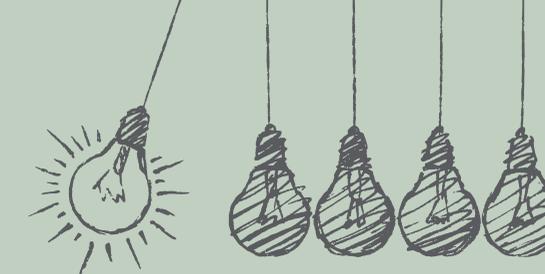


정책은 디테일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후유증 또한 크다. 국가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개인의 때늦은 보상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인 역동성마저 저하되고 있다. 저자는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국가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저자는 그 새로운 길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의 전환,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대학 전문분야 특성화를 통한 교육혁신, 생계형 창업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형 창업과 현재 통합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R&D 시스템을 새롭게 통합하여 구축함으로써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찾는 그 길은 때때로 안개가 자욱하고 갈림길이 너무 많고 표식조차 없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내와 끈기로 두벅 두벅 걸어가면 된다. 다만 그 길을 더 빨리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심학봉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25일 출간



www.bokji.net/edu

2022년 3월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2년 3월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3월 SSN 직무능력향상교육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회계세무	예산수립 및 결산서 작성 실무	3.8.(화)	과정별 50,000원	과정별 150명	10:00~17:00 (6시간)
지역복지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의 이해와 운영 실무	3.15.(화)			
홍보마케팅	2022 모금트렌드 분석 및 실천	3.17.(목)			
사무행정	보고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수립 실무	3.21.(월)			
사례관리	입문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3.24.(목)			
회계세무	비전공자를 위한 사회복지 회계입문	3.28.(월)~29.(화)	100,000원		10:00~17:00 (12시간)

◎ 3월 SSN 컨소시엄교육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인사노무	사회복지 노무관리 실무와 소통하는 인사	3.10.(목)~11.(금)	무료*	과정별 25명	09:00~18:00 (16시간)
홍보마케팅	사회복지 브랜딩과 디지털 홍보	3.14.(월)~15.(화)			
조달계약	사회복지시설 시설(환경) 관리와 계약 실무	3.16.(수)~17.(목)			
프로포절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과 비대면 프로그램 기획	3.23.(수)~24.(목)			
사례관리	지역사회 중심 통합 사례관리 실무	3.30.(수)~31.(목)			

*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유료(30,000원)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 복지넷(www.bokji.net/edu)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교육과정별로 참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당 25명 이상 신청·입금 시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 **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실
T. 02-2077-3928 F. 02-2077-3948 E. essn@ssnkorea.or.kr
- **유의 사항** : 모든 교육과정은 Zoom 화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강의교재는 이메일을 통해 pdf파일로 제공되며, 인쇄된 교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The 행복 한 삶을 응원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등 공제보험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 ❖ 장기저축급여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 복지시설 화재공제
- ❖ 재산종합공제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재가)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배우처)
- ❖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 ❖ 여행배상책임공제
- ❖ 신원(재정)보장공제
-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 회원대여 (담보대여)